

# 28일부터 '만 나이'...술·담배 구매 '연 나이'

### 법제처 '만 나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안내

#### 취학연령·병역의무·공무원시험 예외 적용

법제처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를 정리해 21일 안내했다.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으로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있는 경우를 빼고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령, 계약서뿐 아니라 예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가 적용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권과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 만 60세 이상인 정년, 경로 우대(만 65세 이상) 등이 해당된다.

다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취학연령과 주류·담배 구매, 병역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기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조항은 개별법에 따라 나이 세는 법이 별도로 규정돼 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한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출생 연도'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 이후에 출

생한 사람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도 '현재 연도-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 편의를 위해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등 일부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관련 정책 대상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여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되고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시의회, 윤리심사 지문위원 2명 위촉

광주시의회가 21일 시의회 열린시민홀에서 윤리심사 지문위원 2명을 신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윤리심사 지문위원은 모두 7명으로, 이 중 2명이 임기가 만료됐다. 신규 위촉된 지문위원은 범법적인 동맹과트너스 소속 정인기 변호사와 광주여성회전환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차경희 소장으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의원의 결직과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윤리심사·징계에 관한 윤리특위의 자문을 맡는다. 정무창 의장은 "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와 함께 의회청렴도 향상과 의원의 윤리성 강화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며 "시민의 뜻을 실현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의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견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위촉식 이후 윤리심사지문위는 회의를 열고, 특위 운영방안과 의원 징계 심사 등에 관해 논의했다.

## 보성군 지난해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8.6배 많아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은 21일 "지난해 지역 출생 인연 대비 사망자 수가 8.6배나 많았다. 출산장려지원금을 대폭 증액, 인구절벽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제295회 보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지방소멸과 인구절벽 해소방안으로 출산장려지원금을 전남 최고 수준으로 대폭 인상해줄 것"을 보성군에 촉구했다.

문 의원은 "2022년 출생인구 82명 대비 사망자 수는 707명으로 무려 8.6배가 많았다. 전입자 대비 전출자도 225명이나 많았다"며 지방 소규모 군 단위의 인구절벽 현실을 설명했다. 보성군은 2022년 12월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첫째 아이는 24개월 동안 600만 원, 둘째 아이는 720만 원, 셋째 아이부터는 1080만 원으로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했다.

문 의원은 "이 같은 보성군의 출산장려금 지원은 한 자녀당 5040만 원을 지원하는 전남도내 1위 강진군뿐만 아니라 전남 22개 시군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실효성 있는 출산·양육 정책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보성군의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하는 파격적인 재정 투입과 더불어 국가·지자체의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대책 추진으로 저출산·인구감소 극복에 대한 노력을 아끼없이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원정투쟁 떠나는 정의당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 일본원정투쟁단 출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日 방침 바뀌어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양보 못해"

### "日측 변화, 영향 없어"...정부 '해제없다' 강조

정부는 21일 일본이 후쿠시마 인근 해역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세계 무역기구(WTO)에 다시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일본 측의 변화 여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외부 변수와 무관하게 수입 재개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우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를 언급하고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은 없는 상태고, 외교부를 통해 여러 경로로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확인

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이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압박하지 않고, WTO에 다시 제소하지도 않는 방향의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박 차장은 이에 대해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 WTO 제소에 대응해야 할 우리 정부 부담이 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최대의 국익이며,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타국 선의에 의존해 대응방향을 결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그러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만큼, 우리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박 차장은 앞서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국민들께서도 이를 인정하실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절대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잡히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수입할 수 없다고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정부가 당연히 (향후) 소송 과정에서 지켜내도록 노력할 것이고, 용인할 일은 절대 없다"고 했다.

## 민주, 방중 비판에 "집권여당 해야 할 일 대신 해준 것"

### "輿, 총선 전략...20대 남성 방중 정서에 기대"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대책위원회는 21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논란 속에 중국을 방문한 뒤 두고 비판이 나오자 "정부가 집권당이 먼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야당 의원들이 대신 해주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의 유치하고 유아적인 반응은 결국 총선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민생경제위 대책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방중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중 외교를 강화해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먼저 중국 측에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에서 이번 방중을 '조공 외교'라며 비판한 것을 두고 "그게 현재 여당과 국민의힘 대표의 수준이다.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

파한 판단 때문"이라며 "우리 국민, 특히 20대 남성들에게 일정하게 형성된 방중 정서에 기대 이를 높이는 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경우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싱하이밍 대사의 '중국 베행' 등 발언이 논란을 빚은 것에는 "관계가 악화될 소지가 있을 때일수록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며 "이번 방중은 2달 전부터 일정이 잡혀있었지만, 우리가 먼저 중국 측에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으로부터 훈계성 발언을 듣고 왔다는 지적에는 "말이 다르고 아 다르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가서 훈계나 훈시를 듣고 그렇게 하겠다"라며 "각각 자국의 입장에서 얘기하

는 것을 훈계라는 식으로 표현하면 이전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중국 측에서 이번 방중 비용을 부담한 것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중국 측에서 초청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은 초청국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며 "우리 외교부도 초청을 많이 하는데 그럼 우리 정부가 다 김영란법 위반인가. (여당의 비판이) 너무 수준 떨어져서 말씀을 안 드린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번 방중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기업인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정책 때문에 우리 기업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라도 균형 외교에 나서달라,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중 외교를 강화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서 이에 부응하겠"이라고 말했다.

## 스토킹 범죄, 피해자 원치않아도 처벌

### '반의사 불벌 폐지' 국회 통과...여야, 246명 만장일치 법안 처리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 강화법'이 2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46명 중 찬성 246표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스톱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한편, 긴급 일부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관련 정책 대상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여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되고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스톱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46인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을 조사 과정에서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 공시가 9억 넘는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 국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처리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주택도 주택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재석 240명 중 찬성 237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주택 담보 노후연금보증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정부가 시행령으로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되면서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층이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는 현행 주택의 국적과제 중 하나다. 집값이 고공행진 한 데다 소득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이 바뀌었는데도 주택연금 기준은 유지되고 있어 가입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2019년 21만8163가구에서 지난해 75만7813가구로 247% 증가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지난 2021년 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은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됐다. 법 개정으로 가입 기준까지 완화되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가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4대그룹 총수, 부산엑스포 PT장 총 출동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2차 총회 프레젠테이션에서 직접 영어 연설을 통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당위성을 강조했다. 4대 그룹 총수는 모두 현장에 총 출동해 '부산엑스포 유치 원팀'에 힘을 실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이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는 이날 파리 이시레물리노에서 열린 BIE 제172차 총회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프레젠테이션은 사우디 리야드, 한국 부산, 이탈리아 로마 순서대로 각 30분씩 진행됐다. 한국은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

영상으로 시작해 가수 싸이, 진양교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이수인 에누마 대표에 이어 윤 대통령이 마무리했다. 4대 그룹 총수들을 비롯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등 민간대표단 19명은 관중석에 앉아 열렬한 박수로 프레젠테이션에 호응했다. 행사가 끝난 뒤 정의선 회장은 YTN과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해, 부산에 대해 아주 잘 표현이 됐다. 다른 나라도 그랬지만 한국이 잘한 것 같다"며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희망도 더 많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